

# 여야 '선거구 획정' 기약 없는 줄다리기

### 지역구-비례 수 이견...12월 예비후보 등록때까지도 불투명 획정안 본회의 부결시 대혼란 불가피...현재 시한 넘길수도

내년 4월 20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 선거구 획정안 확정 시한인 11월13일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12월15일을 넘겨서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월2일 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중 몇 개로 할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구 수가 결정되면 비례대표 수도 자동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여야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경계·구역조정 등 세부 작업을 거쳐 법정 시한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해도 향후 일정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심사하게 되는데, 정개특위는 제출받은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단 한 차례에 한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획정위에 획정안의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개특위가 한 차례 수정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놓여진 지역구가 대폭 줄어드는 현실에 비관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한 차례 획정안을 '거부'한다면 획정위는 재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획정안은 정개특위에서 행정적 절차만을 밟은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의원들은 채택 '가(可)', '부(否)'만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본회의에서 실제로 획정안이 부결된다면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획정안을 수정할 주체와 본회의의 처리 규정 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어서다.

'획정안 부결 시 획정위가 다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는 의견과 '국회가 직접 획정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 등의 과정과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

우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을 확정 짓도록 규정한 총선 5개월 전인 11월13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12월15일 전까지 획정안 확정도 장담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변경해야 할 시한으로 제시한 12월31일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대 국회가 번번이 총선을 불과 한 두 달 앞두고서야 획정안을 확정지었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선거구 획정 토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박지원 "탈당 불사" 혁신안 거부

文, 구제방침 시사

강력 비판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혁신위원회 공천 혁신안과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공천이 없으면 '민천'이 있다. 결국 시민, 국민이 공천하는 것"이라며 "당에서 (공천 배제를) 강행한다면 같이 없지 않느냐"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도대체 전직 대표, 모든 중진들한테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하고 가버리면 당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으며, 선거는 누가 치르고 누가 출마하느냐"며 "마치 패배를 위해 혁신한 것처럼 느꼈다"고 혁신위를

통화에서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이 '탈당하지 왜 머무르느냐'며 강하게 분노하는 등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당장 거취를 결정하기 보다는 당의 방침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공천 원천배제 조항을 박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 문 대표는 "박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있었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케이스"라며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쪽으로도 예단을 갖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 국감 브리핑

### "초·중·고 학교 내진 보강 135년 걸릴 판"

박혜자 새정치 의원



306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로 계속 예산이 투자될 경우에는 모든 보강사업을 완료하는데 13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내진 보강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돼 지금 추세로는 사업을 완료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 갑) 의원이 28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내진보강 대상 건물은 1만5323동에 이르지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보강사업이 진행된 건물은 355동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는 4조1389억원이 필요한데, 이 기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LED 전등 교체사업도 전국 초·중·고 교실 중 LED 전등 교체대상 교실 59만4000 곳 중 2012년 이후 실제 교체가 이뤄진 교실은 4만2000곳에 그쳤다. 완료까지 8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결집하는 '안철수 사단'...부활 꿈꾸는 '86그룹'

정기남·송영길 등 총선 체비

을 포럼 형태의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으로 탈바꿈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윤태근·조현우 전 비서관 등 의원실을 떠난 측근 그룹도 최근 들어 안 전 대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등 결속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측근들은 총선전에 뛰어든 체비를 한층 서두르고 있다. 진심캠프 비서실 부실장 출신인 정기남 원내대표 특보는 경기 군포에서 출마할 예정이고, 광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 역시 출마가 유력하다. 이태규 정책네트워크내일 부소장은 경기 고양덕양을 놓고 주류 측 문용식 지역위원장과 당내 경합을 벌이고 있

다.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북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박왕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이사장은 서울 관악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수봉 인천경제연구소장은 인천 계양갑에 사무실을 냈으며, 허영 전 진심캠프 비서팀장은 춘천 지역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6그룹 인사들도 각자 연구소를 마련하거나 당 활동을 재개하는 등 총선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최근 여의도 국회 앞에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활동재개

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아직 지역구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지역구는 인천 계양이지만, 연수와 서구 등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지역구를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지역구인 서울 성동을의 경우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있는 만큼 서울 내 다른 지역을 물색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에서 광주에 출마하려 했다가 서울 동작으로 '차출'된 후 결국 자진사퇴로 선거를 마감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jpark@

### "경영평가 하위 항만공사 방만경영 심각"

황주홍 새정치 의원



을 기관장 업무비로 썼다.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는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6237만원으로 전년 대비 1.7%를

정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항만공사들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은 울산항만공사가 한 해 동안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쓴 돈이 900만 원에 달했다.

D등급으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도 1000만 원이 넘는 돈

으로 972만원을 지급했다. D등급을 받았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기관장 성과급을 없앴으나 임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6961만원이나 됐고, 1인당 성과급이 1천만원이 넘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지난해 부채액은 7730억원이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p>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p>	<p>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p>	<p>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p>
---	--	--